

# “과기·ICT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 정리...“2017년까지 40만개 일자리 창출”

글 **안경애** 디지털타임즈 생활과학부 차장 naturean@dt.co.kr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오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류 문명을 작동하게 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사회 전체에 효과적으로 스며들게 해 경제 활력과 국민들의 행복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미래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ICT 기반 융합형 산업 발굴을 위한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 창조경제형 모델로 경제 중심축을 전환해 오는 2017년까지 40만8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미래부가 내놓은 비전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이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SW)·콘텐츠 핵심사업화 ▲국제협력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창조경제 추진체계 구축 등 23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R&D-시장 잇는 창조생태계 구축

가장 핵심은 박근혜정부의 정책 키워드인 ‘창조경제’를 구체화하는 정책과 사업 발굴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양성,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대규모 신시장·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대학은 창업인재 양성을 위해 창업교육과 산업체 멘토링 등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주기 커리어 프로그램을 올해 중 도입하고, 산학협력단을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으로 육성해 기술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학, 기업과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출연연,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공동연구법인을 2017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2012년 117곳에서 2017년 4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를 구축·운영한다.

기술과 시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벤처캐피털, 엔젤투자를 유치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강화하고, 투자펀드 규모도 지난해 500억 원에서 2014년 1천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요즈마펀드인 ‘(가칭)과학사업화펀드’를 조성해 고위험 고수익 초기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금융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자금도 조성한다. 우선 올해 1천55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문기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각 부처 창업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방식을 직접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및 신수요 창출과 관련, 연구개발(R&D) 성과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가기 위해 R&D 결과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후속 R&D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R&D'와 민간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또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SW·인문·예술 등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이들 요소를 결합한 가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계획.

이상목 미래부 제1 차관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 융합, 생명기술·나노기술 사업화 등 1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올해 2개 시범 프로젝트를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핵폐기물 감축을 통해 영구처분장 소요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파이로 공정기술 개발,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달탐사, 난치암 정복용 의료용 중입자 치료기 개발 등 신기술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뤄진다.

### IT·SW 경쟁력 업그레이드

미래부는 또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 클라우드 산업발전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공과 민간부문의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홈·가전·교통·물류·헬스케어 등 주요 산업에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그림이다.

문화, 의료 등 민간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식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비타민인 ICT를 재래시장, 농업, 중소기업 등에 접목하는 범정부적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 SW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 공동 수요 맞춤형 SW교육과정 확산 등 전주기적 SW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협업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SW정책연구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등 SW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법제도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하도급 관계를 공동 협력관계



▶▶ 미래창조과학부의 5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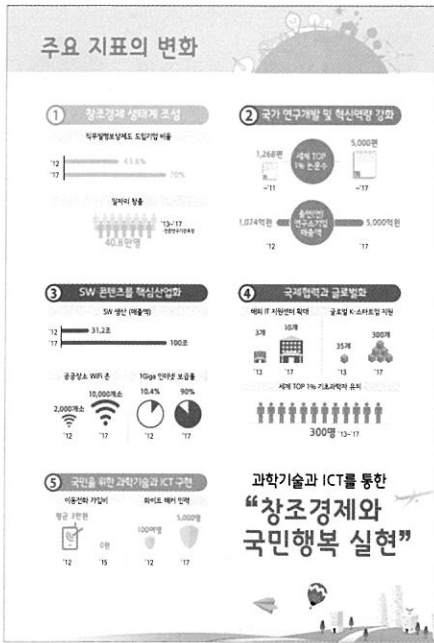
로 전환해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SW 품질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SW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SW뱅크를 운영한다.

SW인구 저변을 넓히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시도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스몰 베이직과 같이 손쉽게 SW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W창의 캠프 등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의 SW관련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랩 설립(2017년까지 모바일 앱, 대형 다규 등 분야에 총 15개)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신분야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과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2013년 40%→2014년 30%→2015년 30%, 연간 5천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 예상)한다. 또 보조금 차별 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요금제 확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선인터넷 전화(mVoIP)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에 담긴 주요 지표 변화 전망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2012년 209개→2017년 300개),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2012년 150건→2017년 500건)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방어기술 개발, 화이트 해커 양성·관리 등을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민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국민들의 상상과 도전, 창업을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미래부는 일명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인 무한상상실을 올해 5개를 시작으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과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해 과학문화 확산사업도 확대한다. 융합형 과학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영재학교·과학고 등에는 다양한 사고와 연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KAIST 등 과학기술특

성화대학은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해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한다.

아울러 SW, 빅데이터 등 전략적 ICT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2017년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40개의 정보통신 아카데미를 지정·지원해 민간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거나 제안받아 대학·출연연이 개발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서랍속 기술'과 결합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국민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각장애인 도우미 기술,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10여 개의 아이টে를 도출, 우선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또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국민, 과학기술자, 인문사회학자 등이 함께 참여해 대상 이슈를 선정, 기술개발과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술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뿌리 내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 역시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이 먼저 시작된다.

지식재산 창출에서 보호, 활용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작업도 펼친다. 올해 말까지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및 민간투·융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표준-특허 간의 삼각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허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상목 차관은 "기초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려면 기술가치 스크리닝, 기술거래, 엔젤투자 등 중간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 생태계가 매우 취약했다"며 "아이디어와 지식, 특허를 사업화하는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도 조성해 나간다. 과학기술 연구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2013년, 82%)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경력단절·미취업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ST**